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전략

- 2013년부터 무상할당 배출권을 줄이고 배출권 경매를 늘려
- EU·ETS 도입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장 운영



2003년 유럽연합은 발전소와 주요산업 온실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 EU-ETS)를 마련하였다. EU-ETS는 EU 기후정책의 주축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탄소거래제도로써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들 간에 매매하는 체계로서 2005년부터 가동, 운영되고 있다.

EU-ETS는 회원국마다 또한 회원국 기업별로 할당하는 배출 상한이 거래의 전제가 되는 총량거래제(Cap-and-Trade)를 적용하여 기업들이 무상 배당받은 탄소배출량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그와 반대로 다 소모하지 않아 남은 여분은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고무하기 위한 제도이다.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기 시험 운영기간을 마쳤고 현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기를 진행 중이다.

EU-ETS 1기 시험기간 중에 들어난 문제점은 첫째, 무상 탄소배출권이 과잉 배당되었다는 점과 2기로 이월이 불가능하여 탄소배출권의 심한 가격 변동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2005-2007년 사이에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30유로에서 10유로대로 하락하다가 수요대비 과잉공급으로 거의 제로가 되는 현상도 연출되었으나 2기에서는 배출권 이월을 가능케 한 대신 배출권 이월로 배출절감노력이 해이해 지는 것을 저지키 위해 벌금을 톤당 40유로에서 100유로로 올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EU-ETS Post 2012 전략

EU는 2009년 12월에 저탄소 경제 구축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증가를 위해 2020년을 기해 지구온난화가스 20% 저감,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20%, 에너지 효율 20% 증가를 목표로 하는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정책을 채택하고 목표 달성 수단으로 EU-ETS제도 수정, 탄소배출권거래 외 탄소저감 노력 배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소 캡처 및 스토리지 방법 개발, 자동차 배출 및 연료 질 향상을 제안하였다.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정책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EU는 2008년 12월 17일에 기존 EU-ETS 지침(2003/87/EC)을 수정한 신 지침(2009/29/EC)을 채택하였다. 이 신 지침은 2013-2020년간 수행될 기초 법규이다. EU 집행위는 신 지침에 따라 탄소배출권 경매 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동 규정안은 2010년 7월 14일 기후변화위원회에서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동 규정안은 오는 10월 중 이사회와 EU의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Post 2012 EU-ETS의 주요 내용

(1) 경매에 의한 유상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U집행위가 신 EU-ETS 지침에 의거, 탄소배출권의 경매(Auctioning) 규정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1기 EU-ETS 시험기간동안에 극소량의 배출권(carbon allowance)이 경매된 한편 2기(2008-2012)인 현재까지도 경매 비중이 극히 낮아(4% 미만) 앞으로 3기부터는 과거 무상할당 배출권 중

심에서 유상할당 배출권 중심으로 전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EU-ETS에서는 무상으로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상 배출권이 기본이 되고 유상배출권은 예외였는데 EU-ETS 3기(2013-2020)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유상 배출권이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이 된다. 2013년에 무상 할당 배출권은 2005-2007년 사이에 확인된 탄소배출량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지정할 예정이며 그 후 직선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0%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부문(industry sectors)에 할당되는 무상 배출권은 주목할 만하다. 2013년에는 무상 배출권의 80%가 제조업 부문에 할당될 것이지만 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20년에는 30%로 감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소누출 리스크 산업분야는 3기 동안에도 100% 무상 배출권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탄소누출 리스크가 큰 산업과 하부 산업부문이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다 해도 엄격한 기준(benchmark)이 적용되는 한편 탄소누출 리스크가 없는 산업부문에는 무상 배출권이 할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경매 배출권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동안에 탄소배출권 경매 비율은 4% 미만에 불과할 것이나 3기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발전(power and heat)부문은 “full auctioning”

2013년부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예외적 조건을 제외하고는 발전부문에 더 이상 무상 배출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EU 중심 15개국의 발전부문은 무상배출권이 부여되지 않고 신 가입 10개 회원국의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도기 동안 일정량의 무상배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3기 동안에 EU의 발전부문에서는 약 50%에 해당하는 연간 1억의 배출권이 경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는 항공부문도 EU-ETS에 포함되고 총 배출권의 15%가 경매되어야 하므로 연간 약 3천만 톤의 배출권이 시장에서 매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무상으로 할당되지 않은 모든 배출권은 모두 경매 대상

경매용 배출권 총량의 88%가 EU-ETS 1기 동안의 배출량을 기초로 회원국들에 분배될 것이며 나머지 10%는 1인당 GDP가 평균 보다 낮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전망되는 회원국에, 나머지 2%는 2005년에 교토의 정서가 설정한 기준 년도 대비 적어도 20%의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저감한 9개 회원국에 분배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각기 할당된 유상 배출권이 경매를 통해 EU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Total cap 감소

EU가 2020년에 회원국에게 할당하게 될 배출권 총량은 2010년부터 매년 1.74% 감소하여 1,720 Mt로 2005년에 비해 21% 감소한 수준이다. 2013년에 EU 집행위가 전 EU 회원국에 할당한 당해 총 탄소배출권은 1,926,876,368톤으로 2기(2008-2012) 동안 EU 회원국들에 할당된 연 평균 탄소배출권 2,032,998,912톤보다 106,122,544톤이 감소한 것이다.

(6) 법적으로 탄소배출권 할당권이 회원국 차원에서

EU차원으로 이동

기존에 탄소 배출권 할당은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 EU차원으로이루어진다.

더 엄격해진 제도로 탄소권 거래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Post 2012 EU ETS에서는 유상 탄소권 거래가 기본 원칙이 되고 무상 탄소권은 예외적으로 할당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는 Post 2012 EU ETS에서 공업가스(특히 HFC 가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에 ‘quality criterion’을 도입하여 실제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프로젝트에만 탄소크레딧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정기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한 청정 기술의 보유여부가 한 기업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K]